

소득과 행복: 자유로운 선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원**

OECD 국가와 같이 일정 수준의 경제적 풍요에 도달한 사회에서는 소득 증가만으로 국민 행복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수준에 도달한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는가'보다, 개인이 주어진 자원과 제도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얼마나 스스로 선택하고 조율할 수 있는가가 행복을 설명하는 핵심 조건으로 부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선택 인식이 매개경로로 작동하는지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UN의 세계행복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불균형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행복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정책이 소득 증대와 재분배를 넘어, 교육·돌봄·고용안전망·사회서비스 등 개인의 선택 가능성과 삶에 대한 통제감을 확대하는 제도적·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개인의 통제감과 역량을 뒷받침하는 심리·사회적 환경을 함께 조성하는 것이 행복정책의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주제어: 행복, 소득, 자유로운 선택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펠로우십의 지원을 받았으며, 202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3A2A02089585).

** 고려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행복, 불평등, 인공지능, 일자리 등이다(E-mail: jiwonkimpic@gmail.com).

I. 서론

행복은 오래전부터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이해되어 왔다(Mill, 1863; Shin & Johnson, 1978).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 행위의 최고선이자 최종목적으로 보았으며, 에피쿠로스 역시 삶의 궁극적 지향을 행복에서 찾았다(Mill, 1863). 이처럼 행복은 오랜 기간 철학적 탐구의 핵심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현대 학문에서는 1980년대 이후 측정과 분석이 가능한 실증적 연구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심리학에서는 부정 정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긍정 정서와 웰빙에 관한 연구가 확장되었으며, Diener(1984)의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개념은 행복을 경험적·체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경제학에서도 Easterlin(1974)이 소득 증가가 반드시 지속적인 행복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득과 행복 간 관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후 행복 연구는 경제학과 심리학을 넘어 행정학, 사회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장되었으며, 개인적·사회적·제도적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려는 다학제적 연구로 발전하였다.

학문적 관심의 확대와 더불어 행복은 정책 영역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였다. 행복은 더 이상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 발전의 수준을 평가하는 주요 정책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한국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등은 GDP를 비롯한 경제성장 중심의 전통적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국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삶의 질을 다차원적으로 측정·비교하려는 대표적인 시도로 자리 잡았다. 이는 행복이 개인의 삶을 평가하는 차원을 넘어 정책의 성과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공적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론적 발전과 정책적 관심의 확대에 따라, 학계에서도 무엇이 개인과 사회의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은 소득(Veenhoven, 1991), 건강(Hartog & Oosterbeek, 1998), 사회적 관계(Helliwell & Putnam, 2004), 교육(Nikolaev, 2018), 자유(Verme, 2009), 가치관(김지원 외, 2022), 민주주의(Dorn et al., 2007), 제도적 요인(Ott, 2005; Ott, 2010) 등 개인적·사회적·제도적 차원의 다양한 요인을 중심으로 행복의 결정구조를 설명해 왔다.

다만, 다양한 요인이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논의되어 왔음에도 소득은 여전히 행복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라 할 수 있다(Veenhoven, 1991). 소득은 단지 경제적 자원의 양

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식량, 주거, 의료와 같은 필수 자원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Veenhoven & Ehrhardt, 1995), 건강(Deaton, 2003), 교육(OECD, 2012), 여가(Williamson & Schouweiler, 2023) 등 삶의 기회 전반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이러한 접근성은 궁극적으로 행복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행복의 관계는 일정 수준 이상에서 정체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Easterlin(1974)은 이른바 ‘이스터린의 역설’을 통해 단순한 경제성장만으로는 행복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행복 연구가 단순한 소득 증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소득이 이후 어떤 심리적·사회적 경로를 통해 삶의 만족과 연결되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최근의 행복 연구는 소득의 절대적 수준 자체보다도, 소득이 개인의 삶에서 어떠한 심리적·사회적 경로를 통해 작동하는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자유로운 선택(freedom of choice)’이다. 이는 개인이 자기 삶의 방향을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이며, 심리적 자율성, 삶에 대한 통제감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심리적 자원이다. 높은 소득은 삶의 선택지를 확장하게 시킴으로써, 건강, 교육, 여가 등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가능케 하고, 이러한 여건은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감각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여러 연구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며(Bavetta et al., 2014; Haller & Hadler, 2004; Inglehart et al., 2008; Pitlik & Rode, 2016), 이러한 인식이 다시 행복 수준과 유의미하게 연결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Brulé & Veenhoven, 2014; Inglehart et al., 2008; Verme, 2009). 즉, 소득은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조건과 결합되며, 자유로운 선택은 행복과 연결되는 심리적 매개 경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소득, 행복, 자유로운 선택 변수 간 연결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특히 고소득 사회에서는 소득의 직접적 소비 효용보다 그것이 삶의 선택권과 통제감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음에도, 이러한 작동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은 첫째, 소득효과의 존재 여부 자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동 경로에 주목한다는 점, 둘째, 자유로운 선택을 단순한 독립변수가 아니라 소득과 행복을 연결하는 매개경로로 재구성한다는 점, 셋째, OECD 국가라는 고소득·제도 안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소득이 자유로운 선택을 매개로 행복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검토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질문을 제시한다. “소득수준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인식을 통해 행복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가?” 이 질문은 소득이 단순한 경제적 성장의 지표를 넘어, 개인의 심리적 자율성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며, 그것이 다시 행복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다. 특히 본 연구가 OECD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자유로운 선택이 행복과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충족된 국가군 내부에서 그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범위설정에 가깝다. OECD 국가들은 대체로 높은 소득수준과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정치적 자유, 교육 기회, 정보 접근성 등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여러 조건이 제도적으로 잘 마련된 국가들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이처럼 제도와 자원이 잘 갖춰진 환경에서도 모든 사람이 이 삶에 만족하거나,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제도적 조건이 같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고 느끼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제한된 선택 속에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지 소득이 얼마나 많냐보다, 그 소득이 개인의 자율성과 삶에 대한 통제감으로 얼마나 잘 전환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물질적 조건이 일정 수준 이상 충족된 사회일수록, 행복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소득의 ‘양’보다는, 그것이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하는지가 핵심적인 설명 요소로 떠오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를 단순한 인과 구조로 환원해 온 기존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이에서 작동하는 심리·사회적 전환 메커니즘에 주목함으로써 이론적 설명력을 확장하고 정책적 논의를 정교화하고자 한다.

II.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

1. 행복

1) 행복의 정의와 측정

(1) 행복의 정의

행복의 정의는 개념이 성립하는 근원(locus)과 행복을 무엇으로 규정하는지에 관한 성격(focus)이라는 두 측면으로 구분해 정리할 수 있다(구교준 외, 2015). 먼저 근원

(locus)은 행복이 외부적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인지, 혹은 개인의 내적 상태에서 ‘형성되는 것’인지에 관한 관점 차이를 의미한다. 행복의 어원과 역사적 용례를 보면,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행복은 대체로 ‘행운(good luck)’ 또는 ‘운(fortune)’과 연결된 외부 조건의 산물로 이해되었다(Oishi et al., 2013). 실제로 Oishi et al.(2013)은 30개국의 사전적 정의를 비교해 24개국(80%)에서 행복 개념에 ‘행운/운’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행복이 오랫동안 외부적 조건에 의존하는 의미망 속에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과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행복은 점차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목표로 재배치되었고, “어떻게 구원받는가”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로 질문의 중심이 이동하며 행복의 근원은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가기 시작했다(McMahon, 2006; Oishi et al., 2013). 더 나아가 1776년 독립선언문에서 행복추구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명시된 점은 행복이 초월적 존재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확보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해 왔다(구교준 외, 2015; McMahon, 2006; Oishi et al., 2013). 경제성장 이후 소비문화의 확산 또한 행복을 자기표현, 욕구, 활기와 같은 개인의 감정·주체성과 연결시키며, 행복을 개인이 성취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동적 개념으로 강화했다(Oishi et al., 2013).

다음으로 행복의 성격(focus)은 행복을 만족·쾌락(hedonism)으로 볼 것인지, 혹은 가치·역량(eudaimonism)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구교준 외, 2015). 쾌락주의(hedonism)는 에피쿠로스 전통에서 발전했으며,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행복을 해석한다(Mill, 1863). 다만 이 전통은 감각적享락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는 입장이라기보다, 이성(logismos)에 기반한 욕망의 분별과 절제를 통해 정신적 평정(ataraxia)과 고통의 부재를 지향하는 실천철학으로 이해된다(Mill, 1863; Nussbaum, 1994). 이러한 쾌락주의는 근대 공리주의와 경제학, 심리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공리주의는 효용(utility)을 쾌락과 연결시키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Mill, 1863). 또한 공리주의적 효용 개념은 신고전경제학의 후생·효용극대화 논리와 결합하며 경제학적 행복 논의의 한 축을 형성했다(구교준 외, 2015). 심리학에서도 1970년대 이후 긍정정서와 만족에 주목하는 흐름 속에서 쾌락심리학(hedonic psychology)이 발전했고, 무엇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혹은 불쾌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확장되었다(Kahneman et al., 1999). 이 맥락에서 행복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대표적 틀로 제시된 것이 Diener(1984)의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SWB)이며, 이는 삶의 만족, 긍정정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부정정서로 행복을 정의한다(Baumgardner & Crothers, 2009; Diener, 1984).

반면 자기실현적 행복(eudaimonism)은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 뿌리를 두며, 행복을 ‘최고의 선’이자 덕성(virtue)의 구현으로 이해한다(Mill, 1863; Myers & Diener, 1995). 이 관점에서 행복은 단기적 쾌락의 축적이 아니라, 이성을 바탕으로 한 중용의 실천과 선한 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잘 사는 삶’에 가깝다(Mill, 1863).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PWB)’ 논의로 확장되었고, Ryff(1989)는 자기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 삶의 목표, 개인적 성장 등 심리적 기능과 자기실현의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 모델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자기실현적 행복 계열의 논의는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의 자율성·유능감·관계성(Deci & Ryan, 1985), 역량접근의 실질적 자유(Sen, 1999), 그리고 기본 역량의 규범적 목록(Nussbaum, 2011) 등으로 확장되었다.

종합하자면, 쾌락적 행복의 연구가 좀 더 행복의 본질을 경험적 질문으로 탐구하며 연구를 통해 답을 찾는 데 중점을 둔다면, 자기실현적 행복 기반 연구는 이론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연구 결과로 검증하며 평가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Baumgardner & Crothers, 2009).

(2) 행복의 측정

앞서 행복의 성격(focus) 측면에서 두 가지 주요 이론적 접근인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이 소개되었다. 이 두 접근은 행복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행복 측정 분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기여는 쾌락적 행복의 성격에 기반한 Diener(1984)의 주관적 안녕이다. 주관적 안녕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측면은 일이나 결혼, 그리고 다른 영역에 대한 특정한 만족에 의해 공급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life satisfaction)’을 의미한다(Myers & Diener, 1995). 정서적 측면은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이루어진다. 정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주로 겪고 있는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덕분에 즐거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Myers & Diener, 1995). 반면, 낮은 정서적 수준을 지니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생활환경과 사건을 바라보지 않다고 평가하며, 불안, 우울증, 분노와 같은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Myers & Diener, 1995).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며, 대신 부정적 정서는 거의 경험하지 않고, 삶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이다(Baumgardner & Crothers, 2009).

이와 더불어, 행복의 또 다른 인지적 측정 방식으로는 캔트릴 삶의 사다리(Cantril Ladder)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캔트릴 사다리는 삶의 사다리라는 단일 문항 척도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포함한다. “상상 속의 사다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다리의 가장 위쪽은 당신에게 있어 가능한 최고의 삶을, 가장 아래쪽은 가능한 최악의 삶을 나타낸다고 가정해 보세요. 현재 시점에서 당신은 이 사다리의 몇 번째 단계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 문항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0에서 10 사이의 점수로 평가한다. 이러한 캔트릴 사다리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척도로 행복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캔트릴 사다리는 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매년 100여 개 국가의 세계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데 핵심적인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자기실현적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 척도가 있다. 심리적 안녕은 ‘자기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의 통제, 삶의 목표, 개인적 성장’이라는 총 6개의 핵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Ryff(1989)의 심리적 안녕 척도 외에도, OECD(2013) 또한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자기실현적 행복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질문들은 ‘자기 긍정, 미래 낙관, 자율성, 가치감, 성취감, 회복력’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응답자들에게 자신과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지금까지 쾌락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에 기반한 측정 문항들을 살펴보았다. 비록 두 관점에서 사용하는 지표와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두 관점은 갈등적 차원이라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평가된다(Baumgardner & Crothers, 2009). 이는 두 관점에서 측정되는 지표들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aumgardner & Crothers(2009)는 쾌락주의 관점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실현의 관점에서도 자신의 강점, 가치, 내적 잠재력,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여길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쾌락주의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은 각각 독립된 개념으로 분리되기보다는 행복의 양쪽 측면을 동시에 반영하는 통합적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소득과 행복

1) 소득의 상대성과 절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현대 사회에서 행복은 개인의 정서적 상태를 넘어, 한 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행복의 결정요인을 다면적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뿐 아니라 경제적 자원과

구조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 왔고, 그중에서도 소득은 물질적 안정과 자원 활용의 기반을 제공하는 변수로서 행복과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다만 소득의 효과가 모든 맥락에서 동일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이견이 존재했으며, 이 논쟁은 크게 절대소득과 상대소득 관점의 대립 속에서 정교화되어 왔다.

소득과 행복 연구의 전환점은 Easterlin(1974)이 제기한 이른바 이스털린의 역설이다. 그는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는 행복을 높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효과가 둔화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단순한 선형함수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Easterlin, 1974). 이후의 연구들은 소득효과가 약화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상대소득 관점을 확장해 왔다. 대표적으로 첫째, 적응효과(adaptation effect)는 소득 증가에 따른 초기 행복 증대가 시간이 지나며 감소하는 현상, 즉 '쾌락의 쳄바퀴(hedonic treadmill)'를 설명한다(Myers & Diener, 1995). Myers & Diener(1995)는 1957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에서 1인당 소득이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매우 행복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해 적응 논리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Kahneman & Deaton(2010)은 감정적 웰빙이 연 소득 약 7만 5천 달러 수준에서 포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소득효과와 비선형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열망 상승(aspiration effect)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대 수준과 욕구 또한 함께 상승해, 소득 증가의 행복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Easterlin, 2001). 이와 유사하게 Diener & Biswas-Diener(2002)는 물질주의적 가치관 확산과 욕구의 가속화가 소득과 행복 간의 연결성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는 개인이 절대소득보다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평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Duesenberry(1962)의 상대적 선호 이론 및 상대소득 가설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으며, Luttmer(2005)는 이웃의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의 행복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함으로써 비교 기반 박탈감의 심리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상대소득 효과가 항상 부정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Caporale et al.(2009)은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준거집단의 소득 증가가 개인 행복에 긍정적으로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터널 효과(tunnel effect)로서 타인의 성취가 미래의 자기 성취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Hirschman & Rothschild, 1973).

한편 절대소득 관점은 소득이 기본 욕구 충족과 생활조건 개선을 통해 행복에 실질적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Veenhoven(1991)은 소득이 더 많은 자원 활용 가능성을 열어 욕구 충족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행복을 높일 수 있음을 논의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소득은 생존과 직결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한다(Biswas-Diener & Diener, 2001; Diener & Biswas-Diener, 2002). 더 나아가 Veenhoven & Ehrhardt(1995)는 살기 좋은 이론(livability theory)을 통해 삶의 만족이 상대적 비교보다 객관적 생활조건과 더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사회 전체의 생활환경이 개선될수록 구성원의 평균 행복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절대적 생활조건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다.

이러한 논의는 실증적으로도 일정 부분 지지된다. Biswas-Diener & Diener(2001)는 인도 콜카타 슬럼가 연구에서 소득과 삶의 만족 간 강한 양의 관계를 확인하며, 소득 증가가 음식·주거 등 기본 욕구 충족을 개선하고 세부 생활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Diener & Biswas-Diener(2002)는 국가 간 비교에서 소득이 기본 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정도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빈곤국에서는 소득이 생물학적 필요 충족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복지제도가 일부 기능을 대체·보완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Hagerty & Veenhoven(2003)은 21개국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소득 증가가 행복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만 그 효과 크기는 제한적이었으며, 이는 소득의 단기적 변동이 행복을 크게 좌우한다기보다, 소득 증가의 영향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형태로 관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 관점과 상대적 관점 모두에서 중요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시각은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를 단순히 선형적 혹은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복합적인 이론적 틀을 통해 더욱 면밀히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소득의 간접적 효과

소득은 개인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제도와 구조의 질을 변화시키는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 특히 1인당 소득수준의 증가는 물질적 풍요 자체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제도적 역량과 공공재 공급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반을 확충하는 과정과 연동된다.

첫째, 높은 소득수준은 정치적·경제적·시민적 자유의 확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Acemoglu et al., 2001; Barro, 1996; Gwartney et al., 2021; Helliwell, 1994).

예컨대 Gwartney et al.(2021)은 경제적 자유 지수(EFW)와 1인당 소득 간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하며, 고소득 국가일수록 법적 안정성, 규제 환경, 대외 개방 등 시장 제도의 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Helliwell(1994)은 1인당 소득(로그)이 민주주의 지수(정치적 권리·시민적 자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 지수 변동의 상당 부분이 소득수준과 연관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성장이 제도적 성숙과 개인의 선택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둘째, 소득수준의 향상은 사회복지지출 확대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재정적 기반이 되며, 이는 충격 상황에서 삶의 질을 보호하고 행복의 격차를 완화하는 경로로 작동할 수 있다(박승준·권오성, 2016; Pampel & Williamson, 1988). Caporale et al.(2009)은 유럽 국가 분석에서 복지 수준에 따라 실업자의 웰빙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복지체계가 경기·고용 충격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1인당 소득은 정부의 청렴도 및 제도적 투명성과도 관련되며(Arvas & Ata, 2011; Treisman, 2000; Ur Rehman & Naveed, 2007), 부패는 주관적 웰빙과 부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숙현, 2020; Li & An, 2020; Tavits, 2008). Helliwell & Huang(2008)은 정치적 안정성, 법치주의, 규제의 질, 정부 효율성, 부패 통제 등 정부의 질 지표가 소득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면서, 제도적 질이 행복 형성에 갖는 구조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공 인프라 확충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또 다른 경로가 될 수 있다. Hagerty & Veenhoven(2003)은 소득 증가의 행복 효과가 개인의 소비 능력뿐 아니라 공공의료, 대중교통, 문화시설, 녹지 등 공공 인프라의 확대에 강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1인당 소득수준이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정치·경제·시민적 자유, 제도적 질, 복지체계, 공공 인프라 등 구조적 요인의 질적 향상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국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

자유로운 선택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정책적 관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이유는 자유로운 선택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Bavetta et al., 2014; Brulé & Veenhoven, 2014; Fleche et al., 2011; Haller & Hadler, 2004; Helliwell et al., 2024; Inglehart et al., 2008;

Veenhoven, 2001; Verme, 2009). Verme(2009)은 75개국 16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득, 노동 상태, 교육 수준, 결혼 여부, 사회적 신뢰 등 다양한 요인을 통제 한 후에도 자유로운 선택이 모든 변수 중 행복에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분석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Haller & Hadler(2004)는 세계가치관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41개국 분석을 통해 자유로운 선택이 행복과 삶의 만족도 모두에 긍정적이고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UN의 세계행복보고서에서도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55개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결정요인(1인당 소득, 사회적 지지, 기대수명, 자유로운 선택, 관대함, 부패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Helliwell et al., 2024). 그 결과, 자유로운 선택은 사회적 지지와 함께 행복에 가장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Helliwell et al., 2024).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Inglehart et al.(2008)은 세계가치관조사 데이터를 분석하 여 개인의 자유 인식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자 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웰빙, 행복, 삶의 만족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이러한 인식은 행복 분산의 약 20~30%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1년부터 2007년까지 185개국, 20만 명에 대한 장기 적 분석에서도 자유로운 선택은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동시에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한편, Brulé & Veenhoven(2014)은 프랑스와 핀란드의 사례 비교를 통해 자유로 운 선택이 국가 간 행복 격차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제시하였다. 두 국가 는 유사한 GDP 수준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행복 수준이 더 높았으며, 이는 핀란드 국민의 인지된 자유와 심리적 자유가 프랑스보다 각각 1.75배, 1.83배 높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 유형별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Bavetta et al.(2014) 는 전체, OECD, 개발도상국, 전환 경제국으로 국가를 분류하여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 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모든 국가군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행복 및 삶의 만족도에 유 의 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개인 수준에서의 분석은 개인 이 삶에서 실질적인 선택권과 통제력을 지닐 때, 그만큼 높은 행복 수준을 경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요약하자면,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평가로서의 ‘자유로운 선택’이 행 복 형성과 유지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다. 이는 자유로운 선택이 단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율성과 정서 적 안정, 삶의 통제감을 강화함으로써 행복의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

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고려는 단순한 권리 보장을 넘어, 사회 전체의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4.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선택의 매개 역할

1) 소득과 자유로운 선택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소득이 행복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특히 자유로운 선택을 매개로 한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소득이 단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노동, 건강, 여가 등 개인의 삶 전반에서 보다 다양한 선택과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적 기반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곽재현·홍경완, 2017; 김동욱 외, 2024; 김지원 외, 2023). 이러한 선택 가능성은 개인이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심리적 만족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행복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지원, 2022).

실제로, 여러 실증 연구들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자유로운 선택의 정도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Bavetta et al., 2014; Haller & Hadler, 2004; Inglehart et al., 2008; Pitlik & Rode, 2016). UNDP가 발행한 2023/2024 인간개발지수 보고서는 세계가치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 분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Conceição, 2024). 그 결과 소득 하위 분위에서는 자유로운 선택의 수준이 낮고 비교적 균등하지만, 상위 분위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라 선택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득 최하위 계층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의 자유로운 선택을 경험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 계층과의 격차는 세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이는 단순히 소득에 따른 격차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인식과 선택 역량의 차이가 다차원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Inglehart et al.(2008)은 이러한 경향을 국가 수준에서 분석하며, 경제성장과 민주화, 가치관의 변화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택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고소득 국가일수록 시민들의 선택 자율성이 더 강하게 인식되며, 이는 단순한 물질적 자원의 축적이 아니라 삶에 대한 통제력 확대, 자율성의 강화와 관련되어 있다. Diener et al.(1995) 또한 개인주의적 문화와 높은 소득수준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

($r = 0.8$)를 확인하며,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이 강조되는 사회일수록 개인의 목표 추구하고 선택이 더욱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Bavetta et al.(2014)은 국가별 분석을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 수준(상·중·하)의 분포를 비교하며, 소득이 높은 개인일수록 고도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고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고도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고한 비율은 26.50%로, 낮은 소득 그룹의 16.52%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석 대상을 OECD 국가로 한정하면, 고·저소득 집단 간 격차는 9.98%에서 5.54%p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원 접근성과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을 통해 저소득층의 기본적 선택조건을 일정 수준 보완함으로써, 소득이 선택권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Bavetta et al., 2014).

종합하면, 선행연구들은 1인당 소득수준이 행복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며(구교준 외, 2014; 구재선·서은국, 2011; 박정인·박민근, 2017; 변미리·최정원, 2016; 이민아·송리라, 2014; Inglehart, 1990; Kim & Ohtake, 2014; Sacks et al., 2012), 소득수준이 자유로운 선택 인식과도 정(+)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Bavetta et al., 2014; Haller & Hadler, 2004; Inglehart et al., 2008; Pitlik & Rode, 2016). 또한 자유로운 선택이 행복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논의도 축적되어 왔다(Abdur Rahman & Veenhoven, 2018; Bavetta et al., 2014; Brulé & Veenhoven, 2014; Haller & Hadler, 2004; Inglehart et al., 2008; Veenhoven, 2000a; Verme, 2009).

다만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소득과 행복, 소득과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 간의 관계를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따라서 소득이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심리·사회적 경로를 통해 행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히 이러한 경로가 고소득·제도 안정 국가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통합적 검토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논의를 확장하여, OECD 국가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자유로운 선택, 행복 간의 매개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고소득 사회에서 소득효과와 재구성상 자유로운 선택의 매개 역할

이러한 문제의식을 한 단계 더 확장하면, 소득과 행복 간 관계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OECD 국가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풍요와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된 고소득 사회에서는, 소득 증가가 행복으로 직결되는 단순한 선형 관계보다 소득이 어떠한 심리·사회적 경로를 통해 삶의 만족으로 전환되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따라서 고소득 사회에서 소득효과를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소득 자체의 직접 효과뿐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과 삶의 통제감이라는 매개 경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기본적 물질 욕구가 비교적 충족됨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Easterlin(1974)과 Easterlin et al.(2010)은 단기적으로 소득과 행복이 함께 변화하는 반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행복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는 않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Clark et al.(2008)은 절대 소득뿐 아니라 상대소득과 사회적 비교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며,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반면 Stevenson & Wolfers(2008)는 광범위한 국제자료를 분석하여 소득과 행복 간 정(+)의 관계가 소득 수준이 높아진 이후에도 지속되며, 일정 수준에서 그 효과가 소멸한다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소득의 행복효과 자체를 넘어, 소득이 어떠한 경로와 조건을 통해 행복으로 연결되는지를 규명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발전을 이룬 사회에서는 소득의 의미가 직접적 소비효용보다 삶의 선택 가능성과 통제감 확대라는 차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Sen(1999)은 소득 자체보다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는지, 즉 역량(capability)의 확대가 복지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은 더 많은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일 뿐 아니라, 교육 기회, 건강 유지, 여가 시간 확보, 노동시장 선택권, 주거 안정성,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 등 개인이 자신의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자유의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예컨대, 자유와 행복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먼저 Inglehart & Welzel(2005)은 인간발전론의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이 개인의 물질적·인지적·사회적 자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선택과 자율성을 제약하던 조건을 완화한다고 보았다. 즉, 경제발전은 단순히 소득수준의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안정성을 높이고 자기표현 가치를 확산시킴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삶을 보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소득 사회에서 행복의 핵심이 물질적 생존 조건을 넘어 자유로운 선택, 자기표현, 삶의 통제감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여러 실증연구에서도 확인된다. Inglehart et al.(2008)은 1981년부터 2007년까지 185개국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자유로운 선택

택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Veenhoven(2000a) 역시 자유와 행복 간 상관관계가 저소득 국가보다 고소득 국가에서 더욱 뚜렷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Clarke(2022)는 부(wealth)를 통제한 이후에도 부유한 국가에서는 자유와 행복 간 정(+)의 관계가 유지되는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그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 생존 제약이 완화된 사회일수록 자유로운 선택과 삶에 대한 통제감이 행복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Delhey(2010)의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행복 결정요인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국가의 부유함, 인간개발 수준, 지식경제화 정도가 높아질수록 소득 만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되는 반면, 자율성의 영향력은 강화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경제발전이 진전된 사회일수록 행복의 결정요인이 물질적 자원에서 삶의 선택권과 통제감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Diener et al.(1995)은 기본 욕구 충족을 통제한 이후에도 소득과 주관적 웰빙 간 유의한 관련성이 유지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경제 발전이 단순히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여가, 건강, 교육·자기개발과 같은 가치 있는 활동의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웰빙에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의 효과는 직접적 소비효용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인이 보다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자유의 확대가 항상 긍정적 결과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Iyengar & Lepper(2000)는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오히려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보였으며, Schwartz & Ward(2004)는 이를 '선택의 역설(paradox of choice)'로 설명하였다. 즉 자유로운 선택은 정보 탐색 비용, 의사결정 피로, 선택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 타인과의 비교 심화 등을 동반할 경우 행복효과가 약화되거나 역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자유의 효용은 보편적이고 자동적인 결과라기보다, 사회적 안전망, 정보 접근성, 제도적 신뢰, 개인의 역량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소득 국가의 제도적 맥락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소득 국가는 경제적 풍요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 시민적 자유, 경제적 자유, 제도적 투명성 등 삶의 선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환경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Acemoglu et al., 2001; Barro, 1996; Gwartney et al., 2021; Helliwell, 1994). Bavetta et al.(2014)은 경제적 자유화와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유로운 선택과 역량 자유가 개인의 행복 증진에 더욱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 수준이 낮고

제도적 신뢰가 높다는 연구(Arvas & Ata, 2011; Treisman, 2000; Ur Rehman & Naveed, 2007)는 경제적 발전이 개인의 자유를 실제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경제성장은 사회복지지출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의 재정적 기반이 되며(박승준·권오성, 2016; Pampel & Williamson, 1988), 이는 실업·질병·돌봄 부담과 같은 생애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선택권이 제약되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다.

종합하면, 고소득 사회에서 소득의 행복효과는 단순히 직접적 소비효용의 차원에 머무르기보다, 자유로운 선택, 삶에 대한 통제감, 선택권의 실질적 행사 가능성과 같은 심리·사회적 경로를 통해 재구성될 가능성이 있다(Clarke, 2022; Delhey, 2010; Diener et al., 1995; Inglehart et al., 2008; Inglehart & Welzel, 2005; Veenhoven, 2000a).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소득효과와 존재 여부를 단순히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이 행복으로 연결되는 작동 메커니즘에 주목한다. 둘째, 자유로운 선택을 행복의 독립적 설명요인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행복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 경로로 파악한다. 셋째, OECD 국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고소득·제도 안정 국가군에서 소득효과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소득, 자유로운 선택, 행복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고소득 사회에서 소득효과와 작동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혼합가설 1: 1인당 소득수준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을 높일 것이다.

가설 2: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유로운 선택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자유로운 선택이 증가할수록 행복수준을 높일 것이다.

Ⅲ. 분석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선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필요와 제도적 안정성을 갖춘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OECD 회원국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가 OECD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한정된 것은 소득과 행복 간 관계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매개적으로 관련되는 경로를 검토하기 위한 이론적 범위설정에 가깝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유와 행복의 관계는 모든 국가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자원과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된 맥락에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Inglehart et al.(2008)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유로운 선택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 관련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Veenhoven(2000a)과 Clarke(2022) 역시 자유와 행복 간의 관계가 고소득 국가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또한 Bavetta et al.(2014)은 OECD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자유로운 선택 격차가 일정 부분 완화되는 양상을 보여, 이들 국가가 최소한의 선택조건과 제도적 완충장치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집단임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한정 은 전 세계 국가를 포괄하는 일반이론의 검증이라기보다, 자유로운 선택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국가군 내부에서 소득, 자유로운 선택, 행복 간의 관련 구조를 더욱 정교하게 식별하려는 분석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분석에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38개국에서 수집된 총 476개의 관측치가 포함되었다.¹⁾ 다만 국가별 자료의 수집 연도와 조사 주기가 상이하므로, 본 연구는 국가별 포함 연도 수가 서로 다른 불균형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가별 관측치 수는 최소 7개년에서 최대 14개년까지 분포하였으며, 대다수 국가는 11~14개년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 연도별로는 초기 연도인 2005~2007년에 포함 국가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OECD 국가가 포함되어 표본 포괄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결측이 특정 국가군에 체계적으로 집중되었다기보다 국제조사 자료의 축적 과정에서 초기 연도 관측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적으로, 통제변수 결측으로 인해 최종 회귀분석에서 제외된 사례는 총 2건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2007년 사회적 지지 변수값이 결측되어 각 1개년씩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최종 분석표본과 원 표본

1)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총 38개국이며, 국가별 포함 연도는 다음과 같다. 14개년은 Chile, Denmark, France, Germany, Italy, Japan, Korea, Lithuania, Mexico, Spain, Sweden, Türkiye, United Kingdom, 13개년은 Australia, Belgium, Canada, Estonia, Greece, Hungary, Ireland, Israel, Latvia, Netherlands, New Zealand, Poland, United States, 12개년은 Austria, Finland, Portugal, Slovenia, 11개년은 Czechia, Luxembourg, Slovak Republic, 10개년은 Colombia, 9개년은 Costa Rica, Norway, Switzerland, 7개년은 Iceland이다.

간 차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통제변수 결측으로 인한 표본선택 편향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²⁾

2. 연구방법

이와 같은 자료구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복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패널 회귀 기반의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매개효과 분석은 단순히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연결 경로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 전략으로 간주된다(MacKinnon et al., 2007). 실제로 선행 연구들에서도 조직성과(옥지호, 2015), 경영성과(이종호 외, 2020), 우울 및 주관적 건강, 자존감(임소정 · 성백선, 2019)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패널회귀분석 기반의 매개효과 분석이 적용되었으며, 반복 관측자료의 시계열 구조를 고려하여 총효과와 간접효과를 단계적으로 분리하여 검증하는 절차가 널리 활용되었다.

매개효과 검증 절차는 Baron & Kenny(1986)의 단계적 접근을 따라 수행하였다(<그림 1> 참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 모형은 식 (1)부터 (4)까지의 네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다. Baron & Kenny(1986)의 방법론에 따르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해 관련 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점검하게 된다.

첫째, 식 (1)은 경로 c 에 해당하며, 1인당 소득수준과 행복 간의 총효과를 추정하는 모형으로, 이 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자유로운 선택을 함수식에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식 (2)는 경로 a 를 설명하며, 1인당 소득수준과 자유로운 선택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셋째, 식 (4)는 경로 c' 와 b 를 동시에 포함하며, 자유로운 선택을 추가한 상태에서 소득의 직접효과(c')와 간접효과(ab)를 분리하여 추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넷째, 식(3)은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자 추가적으로 설정된 모형이다.

이러한 네 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가 부분 매개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경로 a 와 b 가 모두 유의하며, 동시에 경로 c' 계수 크기가 경로 c 값보다 작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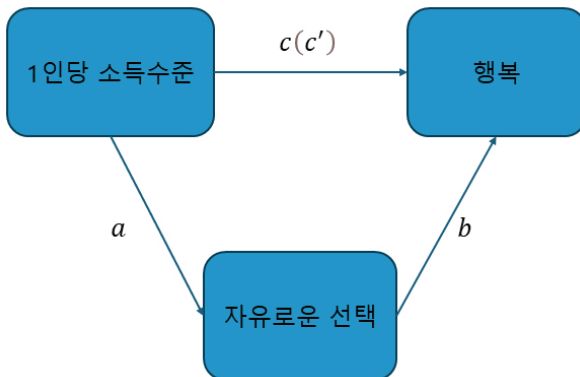
2)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측값 보정 처리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유로운 선택, 행복과 같은 변수들이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지표로, GDP나 실업률과 같은 하드 데이터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관적 평가지표는 시기별 · 국가별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고유한 의미를 지니므로, 통계기법으로서 multiple imputation, 평균 대체, 회귀 추정 등을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통계적 보정 방식은 주관적 지표가 반영하는 사회적 · 정서적 맥락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변수들을 중심으로 균형 패널로 구성하는 것은 자료의 실제 변동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매개효과의 구조적 유효성을 점검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ab)의 통계적 유의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회귀모형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간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Haus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개체 특성과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에는 고정효과 모형을, 기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확률효과 모형을 채택하였다(민인식·최필선, 2019). 또한 본 연구의 핵심 변수들은 국가 내 단기 변동보다 국가 간 구조적 차이를 상당 부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가 간 정보와 국가 내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확률효과 모형이 본 연구의 실증적 목적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패널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분산성과 자기상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모형에 대해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를 적용하여 보다 견고한 표준오차를 추정하였다(Arellano, 1987).

다만, 본 연구는 국가수준 관측자료에 기반한 비실험적 패널분석이라는 점에서 소득 수준과 자유로운 선택, 행복 간 관계에 내재한 역인과성이나 관측되지 않은 국가 특성에 따른 내생성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엄밀한 인과효과의 추정보다는, 변수 간 구조적 연관성과 잠재적 경로를 탐색적으로 검토한 실증분석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Happiness_{it} = a_0 + a_1 GDP\ per\ capit\ it\ a_{it} + a_j \sum X_{itj} + C_i + e_{it} \quad (1)$$

$$Freedom\ of\ choice_{it} = \beta_0 + \beta_1 GDP\ per\ capit\ it\ a_{it} + \beta_j \sum X_{itj} + C_i + e_{it} \quad (2)$$

$$Happiness_{it} = \gamma_0 + \gamma_1 Freedom\ of\ choice_{it} + \gamma_j \sum X_{itj} + C_i + e_{it} \quad (3)$$

$$Happiness_{it} = \delta_0 + \delta_1 GDP\ per\ capit\ it\ a_{it} + \delta_2 Freedom\ of\ choice_{it} + \delta_j \sum X_{itj} + C_i + e_{it} \quad (4)$$

3. 자료 수집 및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행복과 자유로운 선택은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의 세계행복보고서 2020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OECD 국가의 2005~2019년 측정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기초자료인 Gallup World Poll은 각국의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최소 1,000명 이상의 표본을 조사하여 국가별 행복 수준을 산출한다. 행복 변수로 활용되는 삶의 사다리(Cantril Ladder)는 “사다리를 상상해 주세요. 사다리의 가장 아래는 0번, 가장 위는 10번 계단입니다. 사다리의 가장 위는 당신에게 가능한 가장 좋은 삶을, 가장 아래는 가능한 가장 나쁜 삶을 나타냅니다. 현재 시점에서, 당신은 이 사다리의 몇 번째 계단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의 질문을 통해 측정된다. 10점일수록 최고의 삶을 나타내고 0점일수록 최악의 삶을 의미한다.

1인당 소득수준은 UN 세계행복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1인당 소득수준 자료에 로그를 취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지표는 구매력평가(PPP)를 반영한 2011년 기준 불변 국제 달러로 산출된 값으로, 기본적으로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자료에 근거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유로운 선택(freedom of choice)’ 개념은 객관적 제도 자유 그 자체나 자기결정이론에서 말하는 내적 자율성(autonomy)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Abdur Rahman & Veenhoven(2018)에 따르면 자유는 크게 정치·경제·사회적 외부 환경이 제공하는 선택기회로서의 자유, 교육 수준과 정보 접근성 등에 기반한 선택역량으로서의 자유, 그리고 인지된 자유(perceived freedom)의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자유로운 선택은 개인이 주어진 자원과 제도적 조건 속에서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객관적 자유 수준 자체보다는 ‘인지된 자유’에 보다 가

까운 사회심리적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자유로운 선택 역시 세계행복보고서 2020에서 측정된 “Freedom to make life choices”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변수는 갤럽 세계조사(Gallup World Poll)에서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이항형 응답을 국가 단위로 평균한 값이다. 개별 응답 수준에서는 이항 변수로 측정되지만, 이를 국가 수준에서 집계하면 연속적인 평균값의 형태로 나타나며, 국가 간 혹은 시점 간 변동성을 갖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행복방정식에는 선행연구에서 주요 결정요인으로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온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반영하였다(〈표 1〉 참조). 먼저 사회복지지출은 탈상품화와 탈가족화와 같은 제도적 보호를 통해 삶의 안정성을 높이고 개인의 선택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김지연, 2020; 유정민·최영준, 2020; Di Tella et al., 2003; Glass et al., 2016; Pacek & Radcliff, 2008; Radcliff, 2001).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복지지출의 행복효과가 국가별 제도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제한적이거나 상이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Choi & Jang, 2016; Veenhoven, 2000b; Veenhoven & Ouwenel, 1995), 그 영향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환경을 반영하는 부패인식수준 역시 행복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이다. 부패는 제도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인식을 훼손함으로써 주관적 웰빙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이숙현, 2020; Li & An, 2020; Tavits, 2008). 이와 함께 개인의 삶의 조건을 반영하는 건강과 사회적 지지도 행복의 핵심 결정요인으로 고려하였다. 기대수명이나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Easterlin, 2003; Gerdtham & Johannesson, 2001; Helliwell et al., 2023; Helliwell et al., 2020, 2021; Helliwell & Putnam, 2004), 사회적 지지 또한 개인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관계적 자원으로서 행복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준 외, 2014; Helliwell et al., 2020; Pei & Zaki, 2025; Shin & Park, 2022).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국가의 인구학적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고령화율을 통제하였다. 이는 연령과 행복의 관계가 단선적이지 않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U자형 패턴이나 고령층에서의 이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Blanchflower, 2021; Gwozdz & Sousa-Poza, 2010; López Ulloa et al., 2013; Steptoe et al., 2015). 교육수준은 개인의 역량과 기회구조를 확장하는 주요 자원이라는 점에서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론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

부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박정인·박민근, 2017; Kuroki, 2013; Oreopoulos & Salvanes, 2011; Strieβnig, 2015), 다른 연구에서는 그 관계가 비선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Hartog & Oosterbeek, 1998; Helliwell & Putnam, 2004; Inglehart & Klingemann, 2000).

아울러, 노동시장과 분배구조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실업률과 소득불평등을 통제하였다. 실업은 소득 감소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약화와 심리적 불안정을 수반하여 개인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으며(Di Tella et al., 2001; Frey & Stutzer, 2010; Helliwell & Putnam, 2004; Kuroki, 2013; Tao, 2022), 국가 수준의 실업률 역시 평균 행복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Di Tella et al., 2003). 소득불평등 또한 대체로 행복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논의되지만, 그 영향의 방향과 크기는 국가의 사회·제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Diener et al., 1995; Graham & Felton, 2006; Oishi et al., 2011; Tavits, 2008). 마지막으로 분석기간 중 발생한 거시경제적 충격의 영향을 분리하기 위해 2009년 세계금융위기와 2010~2013년 유럽재정위기를 각각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각 통제변수의 자료 출처와 측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복지지출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에서 제공하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지표는 공공부조,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등 일반 정부지출뿐 아니라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지출을 포괄한다. 부패인식수준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지수를 활용하였다. CPI는 공공부문 부패인식수준을 0점(매우 부패)에서 100점(매우 청렴)까지의 척도로 평가한다. 건강관련지출은 WHO에서 제공하는 GDP 대비 공공 건강지출 비율(%)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지표는 경상의료비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개인 대상 의료비뿐 아니라 예방사업, 공중보건 프로그램, 보건행정 및 관리 등 공공 차원의 보건의료 지출까지 포괄한다.

사회적 지지는 Gallup World Poll의 문항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까?”에 대한 이항 응답(0 또는 1)의 국가별 평균값을 통해 측정하였다. 고령화 비중은 OECD에서 제공하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은 UNDP의 평균 교육 이수 연수 지표를 활용하였다. 실업률은 World Bank의 자료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소득불평등은 통상 지니계수로 측정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 기준 지니계수의 결측률이 13.45%에 달해 대안 지표를 활용하였다. 이에 World Inequality Database

의 상위 10% 소득점유율(20세 이상, 세전 국민소득 기준)을 소득불평등 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1〉 변수의 출처 및 설명

변수종류	변수명	출처	변수 설명
종속변수	행복	UN, World Happiness Report	삶의 사다리(0~10점)
독립변수	1인당 소득수준	UN, World Happiness Report(World Bank)	국민 1인당 GDP에 로그를 취함
매개변수	자유로운 선택	UN, World Happiness Report	자신의 삶에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자유에 대한 만족도 (이항 응답의 국가별 평균값)
통제변수	총사회복지지출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부패인식수준 (CPI 지수)	Transparency International	공공부문의 부패인식수준(0~100점)
	건강관련지출	World Health Organization	GDP 대비 건강관련지출(%)
	사회적 지지	UN, World Happiness Report	어려움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존재 여부 (이항 응답의 국가별 평균값)
	고령화 비중	OECD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
	교육수준	UNDP	평균 교육 이수 연수
	실업률	World Bank	총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
	소득불평등	World Inequality Database	세전 소득 상위 10%의 국민소득 점유율
	연도더미	글로벌 금융위기 더미(2009년=1, 기타=0), 유럽 재정위기 더미(2010~2013년=1, 기타=0)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분석

1) 주요 변수별 상·하위 10개국 리스트

본 분석은 2019년을 기준으로 각 핵심 변수별 상위 10개국과 하위 10개국의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국가 간 격차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2019년 기준 36개 국가의 행복 평균 점수는 6.709점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개국에는 핀란드(7.78), 스위스(7.69), 덴마크(7.69), 아이슬란드(7.53), 노르웨이(7.44), 네덜란드(7.43), 룩셈부르크(7.40), 스웨덴(7.40), 아일랜드(7.25), 호주(7.23)가 포함되었다. 반면, 가장 낮은 행복 수준을 기록한 국가는 튀르키예(4.87)였으며, 이어서 대한민국(5.90), 일본(5.91), 칠레(5.94), 그리스(5.95), 라트비아(5.97), 헝가리(6.00), 에스토니아(6.03), 리투아니아(6.06), 포르투갈(6.10)이 포함되었다.

1인당 GDP 수준(로그 제외)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국은 다음과 같다. 룩셈부르크(95,042달러)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아일랜드(74,151달러), 노르웨이(65,695달러), 스위스(59,035달러), 미국(56,626달러)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50,340달러), 덴마크(48,305달러), 아이슬란드(47,550달러), 스웨덴(47,249달러), 오스트리아(46,919달러)가 상위 10위권에 포함되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1인당 GDP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13,579달러)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코스타리카(15,835달러), 멕시코(17,928달러), 칠레(23,067달러), 튀르키예(24,986달러), 그리스(25,656달러), 라트비아(27,247달러), 포르투갈(29,294달러), 헝가리(29,645달러), 폴란드(29,996달러) 순으로 나타나 이들이 하위 10개국에 해당한다.

자유로운 선택은 2019년 기준 0.845점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개국에는 덴마크(0.96), 아이슬란드(0.96), 노르웨이(0.95), 핀란드(0.95), 슬로베니아(0.95), 스웨덴(0.94), 룩셈부르크(0.93), 코스타리카(0.93), 호주(0.92), 스위스(0.91)가 포함되었다. 반면, 하위 10개국에는 그리스(0.61), 튀르키예(0.63), 칠레(0.66), 라트비아(0.70), 대한민국(0.71), 이탈리아(0.71), 슬로바키아(0.77), 벨기에(0.78), 스페인(0.78), 리투아니아(0.78)가 포함되었다.

2) 기초통계량

패널 회귀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표 2>에 제시된 기초통계

량을 확인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패널 구조는 총 38개국,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포함하며, 변수별 관측치 수는 모두 동일하다. 표는 전체 분산(overall), 국가 간 분산(between), 국가 내 분산(within)을 기준으로 각각 평균값과 표준편차, 최솟값 및 최댓값을 제시한다.

우선, 행복의 전체 평균은 6.591로 나타났으며, 국가 간 표준편차는 0.758, 국가 내 표준편차는 0.264로, 행복 수준의 차이가 주로 국가 간 구조적 차이에 기인함을 보여준다. 1인당 소득수준(로그 제외)의 평균은 약 36,026달러로, 국가 간 표준편차가 15,133달러, 국가 내 표준편차가 2,680달러로 나타나, 경제적 여건 역시 국가 간 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자유로운 선택 지표 또한 평균 0.802, 국가 간 표준편차 0.126, 국가 내 표준편차 0.052로, 국가 간 구조적 차이가 좀 더 큰 것으로 관측된다.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를 종합하면, 변수 대부분에서 국가 내 시간적 변동보다 국가 간 수준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총사회복지지출, 부패인식수준, 건강관련지출, 사회적지지, 고령화 비중, 교육수준, 소득불평등은 국가 간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실업률은 국가 간 차이와 함께 국가 내 변동성도 비교적 크게 관측되어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변수임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통제변수들은 전반적으로 국가 간 제도적·사회경제적 맥락의 차이를 잘 반영하는 변수들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 기초통계량

Variable		Mean	Std.Dev.	Min	Max	Obs
행복	overall	6.591	0.792	4.667	8.019	N = 476
	between		0.758	5.251	7.692	n = 38
	within		0.264	5.780	7.707	T = 12.52
1인당 소득수준(로그)	overall	10.416	0.392	9.301	11.462	N = 476
	between		0.408	9.442	11.432	n = 38
	within		0.077	10.097	10.751	T = 12.52
자유로운 선택	overall	0.802	0.136	0.369	0.971	N = 476
	between		0.126	0.505	0.953	n = 38
	within		0.052	0.609	1.031	T = 12.52
총사회복지지출	overall	19.991	6.121	5.877	31.892	N = 476
	between		5.877	6.941	30.710	n = 38
	within		1.488	14.273	25.692	T = 12.52
부패인식수준	overall	66.901	16.934	28.000	96.000	N = 476
	between		16.824	32.143	91.357	n = 38
	within		3.455	45.824	76.818	T = 12.52

Variable		Mean	Std.Dev.	Min	Max	Obs
건강관련지출	overall	8.560	2.238	4.117	16.844	N = 476
	between		2.140	4.622	16.215	n = 38
	within		0.625	6.385	10.457	T = 12.52
사회적 지지	overall	0.908	0.051	0.645	0.987	N = 476
	between		0.044	0.791	0.977	n = 38
	within		0.025	0.757	0.992	T = 12.52
고령화 비중	overall	15.865	4.321	5.559	28.252	N = 476
	between		4.172	6.464	24.694	n = 38
	within		1.213	11.333	19.423	T = 12.52
교육수준	overall	11.722	1.717	5.970	14.170	N = 476
	between		1.716	7.419	13.953	n = 38
	within		0.358	10.028	12.934	T = 12.52
실업률	overall	7.787	4.135	2.246	27.686	N = 476
	between		3.369	3.283	18.763	n = 38
	within		2.404	-2.625	16.971	T = 12.52
소득불평등	overall	0.379	0.093	0.267	0.665	N = 476
	between		0.094	0.285	0.638	n = 38
	within		0.013	0.341	0.450	T = 12.52
연도더미(금융위기)	overall	0.053	0.223	0.000	1.000	N = 476
	between		0.037	0.000	0.111	n = 38
	within		0.220	-0.059	0.981	T = 12.52
연도더미 (유럽 재정위기)	overall	0.296	0.457	0	1	N = 476
	between		0.054	0.111	0.400	n = 38
	within		0.454	-0.103	1.185	T = 12.52

3) 주요 변수들의 연도별 평균 변화 추이

다음은 핵심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표 3>은 주요 변수의 연도별 추세를 요약한 것이며, <그림 2>는 이를 시각화한 것이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행복 수준은 2005년 평균 6.70에서 2019년에는 6.71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 6.5~6.7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에는 6.35로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17년부터는 다시 6.7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1인당 소득수준은 2007년 약 31,625달러에서 2019년 약 40,160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자유로운 선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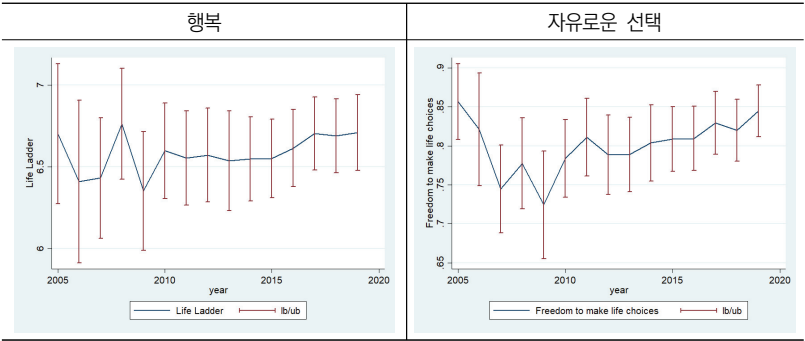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0.724로 하락하며 최저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2019년에는 0.845까지 상승하였다.

〈표 3〉 OECD 국가 대상 주요 변수 평균 추이

year	n	행복	1인당 소득수준	자유로운 선택
2005	18	6.701	32,992	0.857
2006	17	6.411	34,418	0.821
2007	23	6.431	31,625	0.745
2008	28	6.762	36,523	0.778
2009	25	6.352	33,853	0.724
2010	32	6.597	34,500	0.784
2011	35	6.553	33,654	0.811
2012	38	6.571	35,215	0.788
2013	36	6.537	34,157	0.789
2014	37	6.549	35,956	0.804
2015	38	6.551	37,053	0.809
2016	38	6.614	37,662	0.809
2017	38	6.703	38,496	0.830
2018	37	6.689	39,055	0.820
2019	36	6.709	40,160	0.845
총 국가 수/평균	476	6.582	35,688	0.801

주1: 1인당 소득수준은 로그 제외한 값으로 표기함

〈그림 2〉 OECD 국가 대상 주요 변수 평균 추이



주1: 연도별로 포함된 국가 수가 다르며, 특히 초기 연도에는 상대적으로 포함된 국가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세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표 4〉 상관관계 분석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1
1	행복	1										
2	1인당 소득수준	.581***	1									
3	자유로운 선택	.751***	.516***	1								
4	사회복지지출	.212***	.462***	.285***	1							
5	부패인식수준	.684***	.745***	.705***	.427***	1						
6	건강권면지출	.466***	.519***	.445***	.531***	.536***	1					
7	사회적 지지	.570***	.501***	.655***	.443***	.594***	.400***	1				
8	고령화 비중	-.076*	.412***	.071	.702***	.305***	.391***	.276***	1			
9	교육수준	.327***	.594***	.337***	.288***	.595***	.332***	.488***	.464***	1		
10	실업률	-.439***	-.326***	-.447***	.215***	-.366***	-.084*	-.189***	.066	-.360***	1	
11	소득 불평등	-.149***	-.586***	-.233***	-.624***	-.427***	-.271***	-.471***	-.629***	-.558***	-.024	1

주: *p<0.1, **p<0.05, ***p<0.01

2.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 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참조>). 먼저 행복은 1인당 소득수준과 0.581의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유로운 선택과는 0.751로서 더욱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통제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복은 부패인식수준, 사회적 지지, 건강관련지출과 중간수준의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실업률은 행복과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핵심 변수 간 관계를 보면, 1인당 소득수준은 자유로운 선택과 0.516의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선택권과 자율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통제변수 간 상관성을 보면, 소득수준과 부패인식수준($r=-.745$), 자유로운 선택과 부패인식수준($r=-.705$) 사이에서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변수 간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추가로 점검하기 위해 Pooled OLS 추정 이후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VIF 값은 5 미만이었고 평균 VIF 역시 2.70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소득수준, 부패인식수준, 자유로운 선택의 VIF는 각각 3.14, 3.85, 3.37로 확인되어, 회귀계수 추정을 저해할 정도의 심각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통제변수를 모형에 함께 포함하여 후속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3.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선택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기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1인당 소득수준이 행복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그 과정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매개경로로 작동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는 단년도 횡단면 자료에 의존한 선행연구와 달리, 국가 간 구조적 차이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함께 고려하면서 매개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가진다. 분석 설계는 네 단계의 방정식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회귀분석에 앞서,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간의 적합성을 비교하기 위해 이분산성과 군집 내 상관을 고려한 robust Hausman(rhaus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단계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확률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해석을 제시하였다.³⁾ 또한 확률효과 모형은 국가 간 차이와 국가 내 변화를 동시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OECD 국가들 사이의 구조적 격차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함께 고려하려는 본 연

구의 목적과도 부합한다. 다만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 변수들의 변동성이 국가 간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는 비중이 큼에 따라, 확률효과 추정치는 동일 국가 내부의 순수한 변화 효과라기보다 국가 간 구조 차이와 국가 내 변화가 결합된 연관성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확률효과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고정효과 결과 역시 방향성과 유의성 측면에서 함께 비교·검토하였다. 실제로 <표 5>에서 FE와 RE 추정치는 전반적으로 부호가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이는 핵심 결과가 특정 모형 선택에만 의존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다만 FE 계수가 일부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OECD 국가 내부의 연도별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국가 내 변동만으로는 충분한 통계적 식별력이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먼저, 모형 1~2는 1인당 소득수준과 행복 간의 전반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으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총효과(경로 c)를 중심으로 가설 1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모형 3~4는 1인당 소득수준과 자유로운 선택 간의 관계, 즉 경로 a 에 주목하여 가설 2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모형 5~6은 1인당 소득수준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 간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7~8은 통합모형으로서 1인당 소득수준과 자유로운 선택을 함께 포함하여, 1인당 소득수준의 직접효과(경로 c')와 간접효과(경로 $a \times b$)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가설 3과 혼합가설 1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1인당 소득수준이 행복과 어떠한 상관적 관계를 갖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모형2에서 1인당 소득수준은 행복에 유의미한 정(+)의 관련성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형 2에서 1인당 소득수준 변수의 계수가 0.668($p<0.05$)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평균 행복 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가 간 비교와 국가 내 변화를 종합했을 때의 평균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로그변환 변수를 고려할 때 1인당 소득이 약 10% 증가할 경우 행복 점수가 약 0.06점, 20% 증가할 경우 약 0.12점 상승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 결과는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소득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가설 1, 기각하지 않음).

3) 분석 경로마다 robust Hausman 검정을 수행하였다.

모형 1,2	rhausman 검정결과 $\chi^2(11)=7.09(p=0.792)$ 로 귀무가설 기각하지 않음
모형 3,4	rhausman 검정 결과 $\chi^2(11)=10.05(p=0.526)$ 로 귀무가설 기각하지 않음
모형 5,6	rhausman 검정 결과 $\chi^2(11)=4.96(p=0.933)$ 로 귀무가설 기각하지 않음
모형 7,8	rhausman 검정 결과 $\chi^2(12)=4.73(p=0.966)$ 로 귀무가설 기각하지 않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1인당 소득수준이 자유로운 선택 인식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검토하였다. 모형 4에서 그 관계를 확인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유로운 선택 인식의 평균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모형 4에서 1인당 소득수준의 계수는 $0.071(p<0.1)$ 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으며, 이는 국가 평균 수준에서 소득수준과 자유로운 선택 인식 간에 정(+)의 연관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가설 2, 기각하지 않음). 다만 자유로운 선택 변수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국가 단위로 집계한 지표이므로, 이를 개인 수준에서 소득이 선택 기회나 자율성을 직접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국가 수준에서 관찰되는 평균적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유로운 선택 인식이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될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사회복지지출이 소득수준과 자유로운 선택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과 복지지출의 상호작용항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0.008$, $p<0.05$). 이는 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수준과 자유로운 선택 인식 간의 정(+)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유로운 선택이 행복 수준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정효과 모형5, 확률효과 모형6의 모든 행복 방정식에서 자유로운 선택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행복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동일 국가 내부에서 자유로운 선택 인식이 개선될 때도 행복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 간 평균 자유 수준의 차이 역시 행복 격차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1인당 소득수준과 자유로운 선택을 함께 포함한 행복 방정식을 살펴보았다. RE 기준 모형 8에서 자유로운 선택의 계수는 $1.084(p<0.01)$ 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유로운 선택 인식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가설 3, 기각하지 않음). FE 모형 7에서도 계수는 $0.888(p<0.01)$ 로 나타나, 동일 국가 내부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상승할 때 행복이 함께 높아지는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유로운 선택 효과가 국가 간 비교뿐 아니라 국가 내 변화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관찰됨을 시사한다. 또한 모형 8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유로운 선택 지표가 국가 수준에서 0.10단위 상승할 경우 평균 행복 점수가 약 0.108점 증가하고, 0.20단위 상승할 경우 약 0.217점 증가하는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형 8에서 자유로운 선택 변수가 추가된 이후 1인당 소득수준의 계수 크기가 모형 2에 비해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1인당 소득수준의 계수는 모형 2에서 $0.668(p<0.05)$ 이었으나, 자유로운 선택 변수를 함께 포함한 모형 8

에서는 0.579($p<0.05$)로 축소되었다. 이는 소득이 행복과 갖는 관련성의 일부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설명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모형 8의 계수를 현실적인 변화 폭으로 환산하면, 소득 변수가 로그값으로 측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1인당 소득이 약 10% 증가할 경우 행복 점수는 약 0.055점, 20% 증가할 경우 약 0.105점 상승하는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유로운 선택을 통제한 이후에도 소득은 여전히 행복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유지하지만, 그 크기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계적 회귀 절차에서의 개별 경로 유의성과는 별도로, 부트스트랩 기반 간접효과 추정 결과 1인당 소득수준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행복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도는 0.077(Bootstrapped SE=0.036, $z=2.13$, $p<0.05$)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 [0.006, 0.148]에 0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자유로운 선택이 소득과 행복 간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경험적 경로로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혼합가설 1 및 가설 1~3은 제시된 경험자료에 비추어 기각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득수준의 향상은 단지 물질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삶에 대한 통제력과 선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Bavetta et al., 2014; Haller & Hadler, 2004; Inglehart et al., 2008; Pitlik & Rode, 2016). 그러나 ‘자유로운 선택’은 단순히 소득의 산출 값으로 환원될 수 있는 함수적 결과로 보기 어렵다. 자유는 외생적인 자원 분포가 개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리적·사회적 해석 과정이 개입되는 독립된 설명 단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동일한 소득수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선택지로 인식되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가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 문화적 배경, 사회적 경험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로운 선택은 경제적 기반 위에서 형성되지만, 그 실현과 체감은 심리적·인지적 경험에 의해 매개되는 복합적 개념으로서 독립된 분석단위를 구성하며, 소득과 행복 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 연결고리로 기능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OECD 국가와 같은 고소득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풍요와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된 사회에서는 기본적 욕구가 비교적 충족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소득 증가가 행복으로 직결되는 한계효용은 점차 약화될 수 있다. 이는 이스털린의 역설과도 맞닿아 있으며, 고소득 사회에서는 소득의 절대량 자체보다 그 자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삶의 질로 전환되는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로운 선택은 소득효과의 약화를 보완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소득 증가가 직접적인 소비효용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삶의 선택 가능성, 자율성, 미래 계획 능력, 삶에 대한 통제감의

〈표 5〉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선택의 매개효과 검증

	행복			자유로운 선택			행복		
	모형1 FE	모형2 RE	모형3 FE	모형4 RE	모형5 FE	모형6 RE	모형7 FE	모형8 RE	
1인당소득수준	0.545 (0.442)	0.668** (0.287)	0.101 (0.092)	0.071* (0.042)			0.455 (0.414)	0.579** (0.254)	
자유로운선택					0.925*** (0.242)	1.149*** (0.257)	0.888*** (0.241)	1.084*** (0.247)	
사회복지지출	-0.003 (0.020)	-0.002 (0.015)	-0.001 (0.003)	0.000 (0.002)	-0.008 (0.019)	-0.006 (0.013)	-0.002 (0.020)	-0.001 (0.014)	
부패인식수준	0.010* (0.006)	0.011*** (0.004)	0.001 (0.001)	0.002** (0.001)	0.011* (0.006)	0.013*** (0.004)	0.010* (0.006)	0.010** (0.004)	
건강관련지출	-0.013 (0.038)	0.028 (0.027)	-0.002 (0.007)	0.006 (0.005)	-0.009 (0.036)	0.026 (0.023)	-0.011 (0.037)	0.023 (0.025)	
사회적지지	2.202*** (0.656)	2.315*** (0.656)	0.560*** (0.148)	0.632*** (0.159)	1.773*** (0.628)	1.751*** (0.608)	1.705*** (0.620)	1.665*** (0.612)	
고령화비중	0.010 (0.026)	-0.016 (0.020)	0.002 (0.003)	-0.001 (0.003)	0.019 (0.026)	-0.003 (0.020)	0.008 (0.026)	-0.016 (0.020)	
교육수준	-0.013 (0.072)	-0.017 (0.051)	0.003 (0.013)	-0.001 (0.008)	0.021 (0.059)	0.023 (0.045)	-0.015 (0.068)	-0.017 (0.048)	

	행복			자유로운 선택			행복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FE	RE	FE	RE	FE	RE	FE	RE	
실업률	-0.046*** (0.009)	-0.045*** (0.007)	-0.005*** (0.001)	-0.006*** (0.001)	-0.048*** (0.006)	-0.047*** (0.006)	-0.042*** (0.009)	-0.040*** (0.007)	
소득불평등	-1.085 (1.208)	0.507 (0.852)	-0.330 (0.241)	0.055 (0.144)	-0.674 (1.264)	0.241 (0.818)	-0.792 (1.218)	0.524 (0.832)	
금융위기	0.060 (0.063)	0.022 (0.059)	-0.031** (0.012)	-0.041*** (0.012)	0.085 (0.057)	0.055 (0.056)	0.088 (0.060)	0.063 (0.058)	
유럽 재정위기	0.115*** (0.040)	0.088** (0.040)	0.004 (0.007)	-0.000 (0.006)	0.114*** (0.037)	0.091** (0.037)	0.111*** (0.038)	0.087*** (0.037)	
상수	-0.888 (4.286)	-2.817 (2.865)	-0.678 (0.850)	-0.616 (0.443)	3.812*** (1.138)	3.160*** (1.024)	-0.286 (4.196)	-2.101 (2.737)	
N	476	476	476	476	476	476	476	476	
국가 수	38	38	38	38	38	38	38	38	
within R ²	0.378	0.366	0.278	0.258	0.396	0.387	0.401	0.391	
rhausman x ²	7.09		10.05		4.96		4.73		

주 1: 괄호안은 표준오차임

주 2: FE와 RE 모형은 vce(cluster id) 옵션 사용

주 3: *p<0.1, **p<0.05, ***p<0.01

확대로 연결될 경우 행복효과는 여전히 유지되거나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선택의 부담, 사회적 비교의 심화, 성과 책임의 개인화와 같은 조건에서는 자유의 확대가 오히려 행복효과를 약화시키거나 상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고소득 사회에서 자유로운 선택은 소득효과를 단순히 전달하는 매개변수라기보다, 소득의 행복효과를 증폭·완충·재구성할 수 있는 조건부 전환 기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제변수들과 행복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일부 변수에서는 비교적 일관된 상관 경향이 관찰되었다.⁴⁾ 우선, 부패인식수준은 확률효과 모형에서 일관되게 정(+)의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 수준이 높게 보고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 역시 모든 행복 방정식에서 일관되게 정(+)의 방향성을 보이며, 개인이 주변으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유대를 인식하고 있을수록 더 높은 행복감을 보고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실업률도 모든 행복 방정식에서 일관적으로 부(-)의 방향성을 보였다. 국가적 차원의 고용 불안정성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실업률과 행복 간의 일관된 부정 상관관계는 이러한 구조적 맥락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지출 비중과 건강관련지출, 고령화 비중, 교육수준, 소득불평등은 본 분석에서 행복과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럽재정위기 더미가 일부 모형에서 정(+)의 계수로 나타난 것은 재정위기 자체의 긍정적 효과를 의미한다기보다, 해당 시기에 OECD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작용한 비관측 시간효과 또는 동시적 거시환경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4. 부트스트랩을 통한 자유로운 선택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전통적인 단계적 회귀 절차를 통해 소득, 자유로운 선택, 행복 간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였으나,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개별 경로계수의 유의성 여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부트스트랩 재표집(1,000회)을 실시하여 간접효과의 크기와 신뢰구간을 직접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부트스트랩은 분석표본에 포함된 개별 국가-연도(country-year) 관측치를 기준으로 1,000회 복원추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각 재표집 표본 내 회귀모형은 확률효과 모형으로 추정하

4) 추가로 일부 통제변수의 과통제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단계적으로 포함한 강건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 부패인식수준, 건강관련지출, 사회복지지출 등을 순차적으로 추가하더라도 1인당 소득수준과 자유로운 선택의 계수 방향 및 통계적 유의성은 전반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가 특정 통제변수의 포함 여부에 민감하게 좌우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였으며, 표준오차는 국가 기준 군집강건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표 6>에 따르면 1인당 소득수준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행복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경향은 $B=0.077$ (Bootstrapped $SE=0.036$, $z=2.13$, $p<0.05$)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 $[0.006, 0.148]$ 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적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득수준은 자유로운 선택에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고($a=0.071$, $p<0.01$), 자유로운 선택 역시 행복에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나타냈다($b=1.084$, $p<0.01$). 이는 자유로운 선택이 소득과 행복 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유의한 매개 경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⁵⁾

〈표 6〉 부트스트랩을 통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

구분	<i>B</i>	<i>SE</i>	<i>Z</i>	95% <i>CL</i>	
				<i>LLCI</i>	<i>ULCI</i>
총효과	0.668	0.150	4.44***	0.373	0.962
직접효과	0.579	0.147	3.92***	0.289	0.868
간접효과 ($X \rightarrow M \rightarrow Y$)	0.077	0.036	2.13**	0.006	0.148
경로 <i>a</i>	0.071	0.025	2.77***	0.020	0.121
경로 <i>b</i>	1.084	0.257	4.21***	0.578	1.588

주: * $p<0.1$, ** $p<0.05$, *** $p<0.01$

V. 결론

본 연구는 1인당 소득수준과 행복 간의 관계를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벗어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심리·사회적 매개 경로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한 설명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네 단계의 패널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자유로운 선택의

5) 추가적으로, 모든 연도 터미(i.year)를 포함한 확률효과모형에 기초하여 부트스트랩 분석을 수행하였다(<부록 1> 참조). 이 모형에서는 소득이 자유로운 선택에 미치는 직접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트스트랩 재표집(1,000회) 결과, 경로 *a*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고($B=.057$, $SE=.027$, $z=2.05$, $p<.05$), 간접효과 또한 $B=.060$ ($SE=.034$, $z=1.74$, $p=.081$)으로 10% 수준에서 한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도별 공통 시간효과를 더욱 통제한 조건에서도, 소득이 자유로운 선택을 경유하여 행복과 간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일정 부분 유지됨을 보여준다.

매개적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이는 단일 시점의 횡단면 자료에 의존한 기존 연구와 달리, 국가 간 구조적 차이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자유로운 선택,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갖는다. 분석 결과, 1인당 소득 수준은 자유로운 선택을 경유하여 행복과 간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혼합가설 1 및 가설 1~3은 모두 기각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소득이 단지 물질적 자원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소득은 행복에 대한 직접적 영향과 더불어, 삶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주관적 인식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한 소득과 행복 모델을 넘어선 확장적 설명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정책적으로도 함의가 크다. 특히 OECD 국가처럼 일정 수준의 경제적 풍요를 달성한 사회에서는 단순한 소득 증대만으로는 국민의 행복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단지 국민소득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소득이 개인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심리적·사회적 조건과 결합되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면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정한 소득 분배는 단순한 경제적 격차 해소를 넘어, 개인이 교육, 건강, 여가 등 삶의 주요 영역에서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세제 확대, 실업 부조의 보장성 강화, 청년·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등과 같은 소득 보전 정책은 단순한 이전지출을 넘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역량을 뒷받침하는 사회투자정책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수준의 향상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 향상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개인의 실제 삶의 선택권(capability to choose)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동일한 소득수준을 지닌 두 개인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건강, 교육, 고용 기회, 지역 인프라 등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을 경우, 주어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득불평등만을 기준으로 한 단선적인 재분배 정책은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소득 이전을 넘어서, 교육, 돌봄, 고용 등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예컨대, 교육 분야에서는 획일적 학력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애주기

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역량개발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진로 탐색 지원, 청년층 취업 연계 교육, 중장년층 경력 전환 프로그램,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역 기반 평생학습 플랫폼 확대 등은 개인의 미래 선택 가능성과 노동시장 이동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환경에서는 초기 교육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지속적인 재교육 기회의 보장이 중요하다.

돌봄 분야에서는 가족 내부에 돌봄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 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초등 돌봄교실 및 방과 후 돌봄 확대, 고령자·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가족 돌봄 휴가 및 돌봄 휴직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교육·고용·여가 선택권이 제약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돌봄의 사회화는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와 삶의 자율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 의미를 가진다.

고용 분야에서는 단순한 취업을 제고를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경력단절 여성·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재취업 지원, 전직 훈련 및 경력 전환 프로그램 확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제고, 유연근무제와 일·생활 균형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단순히 생계유지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경력과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종합하면, 사회서비스 정책은 단순한 소득 보전이나 취약계층 보호를 넘어, 개인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유로운 선택의 체감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득 재분배가 자원 접근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사회서비스 정책은 제공된 자원이 개인의 삶 속에서 실제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첫 번째 논의가 소득 재분배의 한계와 구조적 격차(자원 접근의 불균형)를 다층적으로 해소해야 함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 논의는 이미 제공된 기회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건의 평등)을 마련해야 함을 부각한다.

셋째, 자유로운 선택은 단순히 소득이나 자원의 함수적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체감되는 사회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심리적·사회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정책적 주목이 필요하다. 동일한 경제적 조건을 지닌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낮거나, 제도에 대한 불신이 강하거나, 정치·사회적 참여 기회가 제한된 환경에서는 삶에 대한 자율성과 선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느끼기 어렵다. 다시 말해, 자유로운 선택은 단순히 자원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원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은 소득의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원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자원과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개인이 제도와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고용·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경력설계, 전직 지원, 심리상담을 연계한 생애주기별 선택 지원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미래 계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 지역 속의 기구, 시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해 개인이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신뢰와 제도에 대한 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정신건강 지원, 사회적 고립 예방, 커뮤니티 기반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개인이 고립감과 불안을 줄이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OECD와 같은 고소득 사회에서는 추가적 소득 증가의 한계효용이 점차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 역시 단순한 GDP 확대에서 삶의 질과 선택 가능성 확대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성장률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 노동시간 자율성, 돌봄 접근성, 주거 안정성, 정신건강, 사회적 신뢰, 평생학습 참여율 등 삶의 통제감과 직결되는 지표를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자유로운 선택이 소득과 행복 간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적 매개 경로로 작동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형식적 자원 접근성의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경제적 자원이 개인의 실질적 선택 기회와 자율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교육·돌봄·고용·정신건강·지역참여율 등을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체계의 정비와 자유로운 선택의 체감 수준을 높여 행복 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의 실천적 함의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선 본 연구는 국가 수준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므로, 국가 평균 수준에서 관찰된 관계를 개인 수준의 인과 메커니즘으로 직접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유로운 선택 변수는 개인 응답을 국가 단위로 집계한 값이지만, 본 연구는 이를 1인당 GDP와 같은 거시적 지표와 결합하여 분석하고 있으므로 분석단위의 차이를 고려한 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이 소득 증가를 통해 자유로운 선택을 경험하고 행복이 증가한다는 미시적 인과관계라기보다, 국가 평균 수준에서 소득, 자유로운 선택, 행복 간에 나타나

는 구조적 연관성과 평균적 경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Gallup World Poll 기반 자료는 자유로운 선택 지표를 국가 단위로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어, 동일 자료를 활용한 개인 수준 패널분석에는 자료 구조상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World Values Survey(WVS), European Social Survey(ESS) 등 개인단위 국제조사를 활용하여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 간의 미시적 메커니즘을 더욱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유로운 선택 변수는 Gallup World Poll의 이항형 문항에 기반하고 있어,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간접하게 포착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 방식은 선택의 자유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반영할 수는 있어도, 선택의 실질적 행사 가능성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구조적 조건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해당 문항이 형식적 자유의 존재 여부를 넘어, 개인이 실제 제도적 기회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경험적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분석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질적 자유를 보다 충실하게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선택 개념이 지닌 다차원적 속성을 보다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부패인식수준과 사회적 지지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제도적 환경과 관계적 조건의 일부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법치주의,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사회신뢰 등 보다 포괄적인 정치·행정적 제도변수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제도적 질(quality of government)과 사회적 신뢰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소득과 자유로운 선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식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가 수준 관측자료에 기반한 비실험적 패널분석이라는 점에서 역인과성이나 동시성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강한 인과적 확정보다는, 이론적으로 정합적인 매개 연관성과 경험적으로 관찰된 관계의 수준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곽재현·홍경완. 2017. “소득에 따른 여가 불평등: 여가시간·지출과 행복의 관계.” 《관광연구》, 32(5): 293-309.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 317-339.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21(2): 95-130.
- 구재선·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5(2): 143-166.
- 김동욱·김지원·구교준. 2024. “생애주기에 따른 불평등과 행복.” 《한국행정학보》, 58(1): 163-195.
- 김지연. 2020. 《탈가축화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부의 질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원. 2022.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 불평등: 소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60(4): 325-352.
- 김지원·김동욱·구교준. 2022. “가치관에 따른 소득 불평등과 행복 관계 분석.” 《한국행정학보》, 56(4): 191-214.
- 김지원·김동욱·구교준. 2023. “불평등에 관하여: 우리나라 불평등 추이와 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부학연구》, 29(3): 171-207.
- 민인식·최필선. 201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Version15》. 2판. 파주: 지필미디어.
- 박승준·권오성. 2016. “패널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OECD 국가의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 결정요인과 상충관계 분석.” 《국제경제연구》, 22(4): 33-57.
- 박정인·박민근. 2017. “삶의 만족과 경제적 수입: Easterlin 의 역설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19(3): 69-88.
- 변미리·최정원. 2016. “서울 시민의 행복 메커니즘: 시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조사연구》, 17(2): 61-84.
- 옥지호. 2015.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석에 의한 조직양면성의 매개효과 검증.” 《인적자원관리연구》, 22(1): 45-71.
- 유정민·최영준. 2020. “복지국가는 어떻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유안정성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2(1): 87-116.
- 이민아·송리라. 2014. “소득, 물질주의와 행복의 관계.” 《한국인구학》, 37(4): 89-114.
- 이숙현. 2020. 《부패가 행복과 행복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65개 국가의 소득 수준

- 별 차이를 고려하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호 · 김태환 · 정우진. 2020. “패널구조방정식을 활용한 IT기업의 R&D투자효과 연구: 특히 매개효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21(1): 137-150.
- 임소정 · 성백선. 2019. “고용형태와 건강의 매개변수: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한 패널 회귀분석.” 《보건사회연구》, 39(4): 71-108.
- 한준 · 김석호 · 하상응 · 신인철. 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1-24.
- Abdur Rahman, Amanina, & Veenhoven, Ruut. 2018. “Freedom and happiness in nations: A research synthesi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3(2): 435-456.
- Acemoglu, Daron, Johnson, Simon, & Robinson, James A. 2001.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1(5): 1369-1401.
- Arellano, Manuel. 1987. “Computing robust standard errors for within-groups estimator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 Statistics*, 49(4): 431-434.
- Arvas, Mehmet, & Ata, Ahmet. 2011. “Determinants of economic corruption: a cross-country data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Social Science*, 2(13): 161-169.
- Baron, Reuben M., & Kenny, Davi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ro, Robert J. 1996.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empirical study*. NBER Working Papers 569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Baumgardner, Steve R., & Crothers, Marie K. 2009. Positive psychology. 안신호 · 이진환 · 신현정 · 홍창희 · 정영숙 · 이재식 · 서수균 · 김비아 역(2009). 《긍정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Bavetta, Sebastiano, Navarra, Pietro, & Maimone, Dario. 2014. *Freedom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An economic and politic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swas-Diener, Robert, & Diener, Ed. 2001. “Making the best of a bad situation: Satisfaction in the slums of Calcutta.” *Social indicators*

- research*, 55(3): 329-352.
- Blanchflower, David G. 2021. "Is happiness U-shaped everywhere? Ag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145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4(2): 575-624.
- Brulé, Gaël, & Veenhoven, Ruut. 2014. "Freedom and happiness in nations: Why the Finns are happier than the French." *Psychology of Well-being*, 4: 17.
- Caporale, Guglielmo M., Georgellis, Yannis, Tsitsianis, Nicholas, & Yin, Ya Ping. 2009. "Income and happiness across Europe: Do reference values matte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0(1): 42-51.
- Choi, Young-Chool, & Jang, Ji-Hyun. 2016. "Relationships among social policy factors,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happines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1(4): 1189-1205.
- Clark, Andrew E., Frijters, Paul, & Shields, Michael A. 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1): 95-144.
- Clarke, Simon. 2022. "Freedom and Happiness: Does Freedom Make People Happ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Bulletin of Yerevan University*, 1(1): 140-155.
- Conceição, Pedro. 2024. *Human Development Report 2023/24. Breaking the Gridlock: Reimagining Cooperation in a Polarized Worl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 Deaton, Angus. 2003. "Health, inequ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1(1): 113-158.
- Deci, Edward L., & Ryan, Richard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 Delhey, Jan. 2010. "From materialist to post-materialist happiness? National affluence and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97(1): 65-84.
- Di Tella, Rafael, MacCulloch, Robert J., & Oswald, Andrew J. 2001. "Preferences over inflation and unemployment: Evidence from surveys of happiness." *American Economic Review*, 91(1): 335-341.

- _____. 2003.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4): 809-827.
- Diener, Ed.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d, & Biswas-Diener, Robert. 2002. "Will money increase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57: 119-169.
- Diener, Ed, Diener, Marissa, & Diener, Carol. 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851-864.
- Dorn, David, Fischer, Justina A. V., Kirchgässner, Gebhard, & Sousa-Poza, Alfonso. 2007. "Is it culture or democracy? The impact of democracy and culture on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 505-526.
- Duesenberry, James S. 1962.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Easterlin, Richard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pp. 89-125). Academic press.
- _____. 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The economic journal*, 111(473): 465-484.
- _____. 2003. "Explaining happines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0(19): 11176-11183.
- Easterlin, Richard A., McVey, Laura A., Switek, Malgorzata, Sawangfa, Onnicha, & Zweig, Jacqueline S. 2010. "The happiness-income paradox revisite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52): 22463-22468.
- Fleche, Sarah, Smith, Conal, & Sorsa, Piritta. 2011. *Exploring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World Value Surve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921, OECD Publishing.
- Frey, Bruno S., & Stutzer, Alois. 2010.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human well-be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erdtham, Ulf-Göran, & Johannesson, Magnus.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 happiness, health, and socio-economic factors: results based on Swedish microdata.”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0(6): 553-557.
- Glass, Jennifer, Simon, Robin W., & Andersson, Matthew A. 2016. “Parenthood and happiness: Effect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n 22 OECD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2(3): 886-929.
- Graham, Carol, & Felton, Andrew. 2006. “Inequality and happiness: insights from Latin America.”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4: 107-122.
- Gwartney, James D., Lawson, Robert A., Hall, Joshua C., Murphy, Ryan H., Callais, Justin T., Fike, Rosemarie, ... & van Staden, Martin. 2021.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1 Annual Report*. Fraser Institute.
- Gwozdz, Wencke, & Sousa-Poza, Alfonso. 2010. “Ageing,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st old: An analysis for Germany.” *Social indicators research*, 97(3): 397-417.
- Hagerty, Michael R., & Veenhoven, Ruut.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 1-27.
- Haller, Max, & Hadler, Markus. 2004. “Happiness as an expression of freedom and self-determination: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In *Challenges for quality of life in the contemporary world: Advances in quality-of-life studies*, theory and research (pp. 207-231). Springer.
- Hartog, Joop, & Oosterbeek, Hessel. 1998. “Health, wealth and happiness: why pursue a higher educa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7(3): 245-256.
- Helliwell, John F. 1994. “Empirical linkages between democracy and economic growth.”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4(2): 225-248.
- Helliwell, John F., & Huang, Haifang. 2008. “How’s your government? International evidence linking good government and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4): 595-619.
- Helliwell, John F., Huang, Haifang, Norton, Max, Goff, Leonard, & Wang, Shun. 2023. “World happiness, trust and social connections in times

- of crisis.” In *World Happiness Report 2023, Chapter 2.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elliwell, John F., Huang, Haifang, Shiplett, Hugh, & Wang, Shun. 2024. “Happiness of the younger, the older, and those in between.” In *World Happiness Report 2024* (pp. 9-60), Oxford: Wellbeing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Oxford.
- Helliwell, John F., Huang, Haifang, Wang, Shun, & Norton, Max. 2020. “Social environments for world happiness.” In *World Happiness Report 2020* (pp. 13-46),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 _____ . 2021. “World happiness, trust and deaths under COVID-19.” In *World Happiness Report 2021* (pp. 13-57),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elliwell, John F., & Putnam, Robert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 Hirschman, Albert O., & Rothschild, Michael. 1973. “The changing tolerance for income inequality i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a mathematical appendix.”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4): 544-566.
-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Foa, Roberto, Peterson, Christopher, & Welzel, Christian. 2008.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happiness: A global perspective (1981-2007).”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4): 264-285.
- Inglehart, Ronald, & Klingemann, Hans-Dieter. 2000.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165-183). The MIT Press.
- Inglehart, Ronald, & Welzel, Christian.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yengar, Sheena S., & Lepper, Mark R. 2000. “When choice is demotivating: Can one desire too much of a good thing?”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79(6): 995-1006.
- Kahneman, Daniel, & Deaton, Angus. 2010.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38): 16489-16493.
- Kahneman, Daniel, Diener, Ed, & Schwarz, Norbert. 1999. *Well-being: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Russell Sage Foundation.
- Kim, Hisam, & Ohtake, Fumio. 2014. *Status race and happiness: What experimental surveys tell us*. KDI Policy Study.
- Kuroki, Masanori. 2013. "Crime victimiz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from happiness dat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3): 783-794.
- Li, Qiang, & An, Lian. 2020. "Corruption takes away happiness: Evidence from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1(2): 485-504.
- López Ulloa, Beatriz F., Møller, Valerie, & Sousa-Poza, Alfonso. 2013. "How does subjective well-being evolve with age?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6(3): 227-246.
- Luttmer, Erzo F. P. 2005. "Neighbors as negatives: Relative earnings and well-be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3): 963-1002.
- MacKinnon, David P., Fairchild, Amanda J., & Fritz, Matthew S. 2007. "Mediation analysis." *Annu. Rev. Psychol.*, 58(1): 593-614.
- McMahon, Darrin M. 2006. *Happiness: A history*. Grove Press.
- Mill, John S. 1863. Utilitarianism. 이종인 역(2020). 《공리주의》, 현대지성.
- Myers, David G., & Diener, Ed.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
- Nikolaev, Boris. 2018. "Does higher education increase hedonic and eudaimonic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9(2): 483-504.
- Nussbaum, Martha C. 1994. *The therapy of desire: Theory and practice in Hellenistic eth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11.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한상연 역(2015). 《역량의 창조: 인간다운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돌베개.
- OECD. 2012. *Equity and quality in education: Supporting disadvantaged*

- students and schools*. OECD Publishing.
- _____.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 Oishi, Shigehiro, Graham, Jesse, Kesebir, Selin, & Galinha, Iolanda C. 2013. "Concepts of happiness across time and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5): 559-577.
- Oishi, Shigehiro, Kesebir, Selin, & Diener, Ed. 2011. "Income inequality and happiness." *Psychological science*, 22(9): 1095-1100.
- Oreopoulos, Philip, & Salvanes, Kjell G. 2011. "Priceless: The nonpecuniary benefits of school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5(1): 159-184.
- Ott, Jan. 2005. "Level and inequality of happiness in nations: Does greater happiness of a greater number imply greater inequality in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4): 397-420.
- Ott, Jan. C. 2010. "Good governance and happiness in nations: Technical quality precedes democracy and quality beats siz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3): 353-368.
- Pacek, Alexander C., & Radcliff, Benjamin. 2008. "Welfare policy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An individual-level assess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1): 179-191.
- Pampel, Fred C., & Williamson, John B. 1988. "Welfare spending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1950-198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6): 1424-1456.
- Pei, Rui, & Zaki, Jamil. 2025. "Connecting with others: How social connections improve the happiness of young adults." In *World Happiness Report 2025* (pp. 123-158), Oxford: Wellbeing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Oxford.
- Pitlik, Hans, & Rode, Martin. 2016. "Free to choose? Economic freedom, relative income, and life control percep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6(1): 81-100.
- Radcliff, Benjamin. 2001. "Politics, markets, and life satisfa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human happin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939-952.

- Ryff, Carol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acks, Daniel W., Stevenson, Betsey, & Wolfers, Justin. 2012. "The new stylized facts about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 12(6): 1181-1187.
- Schwartz, Barry, & Ward, Andrew. 2004. "Doing better but feeling worse: The paradox of choice." In *Positive psychology in practice* (pp. 86-104). Wiley.
-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김원기 역(2013).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
- Shin, Doh C., & Johnson, Donal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
- Shin, Huiyoung, & Park, Chaerim. 2022.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younger and older adults: The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3: 1051968.
- Stephoe, Andrew, Deaton, Angus, & Stone, Arthur A. 2015. "Subjective wellbeing, health, and ageing." *The lancet*, 385(9968): 640-648.
- Stevenson, Betsey, & Wolfers, Justin. 2008. *Economic Growth and Subjective Well-Being: Reassessing the Easterlin Paradox*. NBER Working Paper No. 1428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Striebnig, Erich. 2015. *Too educated to be happy? An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IASA Interim Report IR-15-015.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IIASA).
- Tao, Hung-Lin. 2022. "Unemployment only temporarily lowers happiness in an eastern society."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26(3): 1713-1732.
- Tavits, Margit. 2008. "Representation, corrup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12): 1607-1630.
- Treisman, Daniel. 2000. "The causes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6(3): 399-457.
- Ur Rehman, Hafeez, & Naveed, Amjad. 2007. "Determinants of Corruption and its Relation to GDP:(A Panel study)." *Journal of Political Studies*, 12(1): 27-59.
- Veenhoven, Ruut.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 _____. 2000a. "Freedom and happiness: A comparative study in forty-four nations in the early 1990s." In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257-288), Cambridge, MA: MIT Press.
- _____. 2000b. "Well-being in the welfare state: Level not higher, distribution not more equitable."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2(1): 91-125.
- _____. 2001. "Quality-of-life and happiness: Not quite the same(Translated in English)." In G. DeGirolamo (Ed.), *Salute e qualita dell vida* (Published in Italian). (pp. 67-95), Torino, Italy: Centro Scientifico Editore.
- Veenhoven, Ruut, & Ehrhardt, Joop. 1995. "The cross-national pattern of happiness: Test of predictions implied in three theories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1): 33-68.
- Veenhoven, Ruut, & Ouwenel, Piet. 1995. "Livability of the welfare-state: appreciation-of-life and length-of-life in nations varying in state-welfare-effort." *Social indicators research*, 36(1): 1-48.
- Verme, Paolo. 2009. "Happiness, freedom and contro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1(2): 146-161.
- Williamson, Hannah C., & Schouweiler, Megan T. 2023. "Household income differentiates quantity and quality of shared spousal tim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7(4): 528-537.

〈부록 1〉 부트스트랩을 통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연도더미 전체 추가)

구분	<i>B</i>	<i>SE</i>	<i>Z</i>	95% <i>CL</i>	
				<i>LLCI</i>	<i>ULCI</i>
총효과	.517	.151	3.42***	.220	.812
직접효과	.439	.145	3.02***	.154	.724
간접효과 ($X \rightarrow M \rightarrow Y$)	.060	.034	1.74*	-.007	.128
경로 <i>a</i>	.057	.027	2.05**	.002	.111
경로 <i>b</i>	1.055	.266	3.95***	.532	1.578

주: * $p < 0.1$, ** $p < 0.05$, *** $p < 0.01$

Beyond Income: Freedom of Choice and Happiness in OECD Countries

Jiwon Kim

In economically advanced societies such as the OECD countries, further income growth alone may be insufficient to produce sustained improvements in national happiness. At higher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individuals' ability to make meaningful choices within given resource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may matter more for well-being than the accumulation of material resourc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erceived freedom to make life choice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appiness. Using World Happiness Report data, an unbalanced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for OECD countries over the period 2005–2019. The results show that higher national income is associated with greater perceived freedom to make life choices, which in tur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happine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appiness policies should move beyond income growth and redistribution toward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and social conditions—including access to education, care services, employment security, and social services—that enhance individuals' capacity to make meaningful choices and to exercise greater control over their lives.

※ Keywords: Happiness, Income, Freedom of Choice